

특별기고

최명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장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덮친 초대형 산불은 많은 인명과 산림,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불길 속에 휩싸이며, 피해 면적만 해도 축구장 약 6만 3000개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했다. 단일 재해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기며, 단순한 자연재난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경각심과 과제를 동시에 던졌다.

이번 산불의 심각성은 단지 화재의 규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록적인 겨울 가뭄과 이례적인 고온·강풍이 동시에 겹친 이상기후의 복합적 결과였기 때문이다. 불리한 기후 조건은 불길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진화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국 피해를 극대화하는 원인이 되었다.

산불은 더 이상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재난이 아니다. 이제는 연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시재난’으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기후 위기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도발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이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선제적 재난 대응’ 필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지난해 우리는 기후 위기의 실재를 체감한 한 해였다.

역대 가장 더운 여름, 기록적인 열대야, 장마철 집중호우, 예기치 못한 폭설까지 사계절 내내 자연이 보내는 경고에 직면했다. 그리고 올해 여름도 결코 예외가 아닐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며, 단기간에 집중되는 ‘게릴라성 폭우’도 잦아지는 추세로 기상이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기후재난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산림과 농경지, 해안과 도서 지역이 고루 분포해 있으며,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이 많아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선제적 재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상이변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과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 점검, 고령자·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대피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예방만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기초 아래, 여름철을 앞두고 재난 취약 지역과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섰다.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노후 저수지, 배수펌프장, 하천 둔치 주차장, 반지하주택,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을 정밀진단하고 있으며 비상연락망 정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사전 모의훈련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폭넓게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역시 재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 왔으며,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하지만, 아무리 체계적인 예방·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도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심코 버린 담배꽂이 하나, 정비되지 않은 배수로, 허술한 대피계획 등 하나하나가 재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위기 앞에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기후재난은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이나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직면한 시대적 과제이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재난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편이다. 공공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더해질 때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상기후가 가져올 다음 위기를 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골든 타임이다.

기고

한경록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실증은 기술 상용화의 중요한 단계로서 기술의 성능과 안정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시장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기업은 실증을 통해서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자 유치와 시장 진입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

실증의 목적은 기술의 혁신을 산업의 혁신으로 연계하기 위해 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검증하는 데 있으며, 실증 과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을 개선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기술 검증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기술의 실용성을 확인하는 것과 시장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실증은 기술 사용자의 참여와 수요를 끌어내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증의 사회적 가치창출이 강조되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부문 실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증으로 투자와 자본을 끌어들이고 도시를 홍보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측면에서 실증은 현실 검증·성능 확인, 제품 개선, 시장 적

실증을 통한 기업과 도시의 동반 성장

합성 평가, 신뢰성 확보, 규제 준수 및 인증, 파트너십 및 투자유치, 고객 피드백 반영 측면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기술성숙도 단계는 1~9단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TRL 5~7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의 기업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환경 또는 실제와 비슷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는 실증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기술의 사용을 보장하는 도시의 테스트베드 역할 또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광주지역 곳곳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는 공공업무시설, 편의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 실증자원이 3300여개가 있다. 공공 인프라 조사를 실증자원을 목록화해 기업이 실증을 요청할 때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

지난해 광주연구원에서는 2023년에 광주에서 실증을 진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인터뷰를 실시한 바 있다. 실증지원 수혜기업은 실증장소 제공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도가 높고, 실증의 기회가 현장에서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개선점을 발견해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수혜기업 간 기술 및 서비스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신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에 활용하려는 니즈도 나타났다.

다만, 한 번의 실증으로 끝나지 않고 회차를 거듭해서 오랫동안 실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했고, 수혜기업이 모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행사의 필요성과 실증을 위해서는 전기, 통신, 시설물 관련 여러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전 협조, 동행 등 지자체의 관심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업들이 광주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인공지능 기반 혁신기술 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이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면서 기업은 실증 실적을 확보하고 보다 개선된 제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광주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기업과 도시가 같이 성장하는 도시 모델을 목표로 해, 인공지능 기술 중심의 실증경쟁력이 기업경쟁력으로, 그리고 도시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시환경(시민의 삶) 속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실증 과정에서 활용해 도시 지능을 구현하는 것에 실증사업의 의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공공 인프라 개방으로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공공구매를 확대해 초기 시장을 형성시켜 기술기업의 성장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실증이 결과적으로 사업화로 연결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신사업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과 문화가 토대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AI도시, 창업도시, 실증도시 광주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고 있다.

독자투고

농번기 농기계 사고 부주의에서 시작

완연한 봄을 느끼게 하는 시기가 되면서 지금 농촌에서는 한해의 결실을 좌우할 분주한 농번기가 시작됐다.

봄철이 되면서 농민들이 들녘에서 농사일을 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가 등 농기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봄철 한해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계절에 농기계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농촌 도로 대부분이 시야확보에 용이한 가로로써 상대적으로 적게 설치돼 있어 야간에 자동차가 앞서 주행중인 경운기 등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 예방에 왕도는 없다. 경운기 등 농기계 운전자는 야간운행을 자제하는 한편 부득이 야간운행 시 점멸등, 반사지 등 야간 시인성 확보 안전장치가 선행된 후 도로에 나설 필요가 있고 운전자 또한 야간운전시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긴장 운전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매년 농번기철이 되면 급증하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몰 이후에는 농기계 운행을 자제하고, 야간 반사경이나 야광 페인트를 칠해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하자.

김덕형 정성경찰 경무계장

OPINION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사설

주요후보 대선공약 ‘경제살리기’ 지켜져야

6·3 대선에 출마하는 각 당 주요 후보들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자신과 소속 정당의 10대 핵심공약을 일제히 발표하며 정책경쟁에 돌입했다고 한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가장 먼저 인공지능(AI)과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또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를 통한 사법 개혁 완수 등 정치·사법 공약도 내놓았다.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도 포함했다.

제2당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또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도 발표했다.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퇴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경제 공약도 발표했다. 저마다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담은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 공약중 눈길을 끄는 것은 제1당과 제2당 후보가 1호 공약으로 ‘경제 살리기’를 내건 것이다. 이는 미국 트럼프발 세계 경기 불확실성과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다는 얘기다.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선 후 당선된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은 대부분 50%를 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하다. 이들 공약 외에 각 지자체와 이익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많은 공약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 특히 경제살리기 공약이 ‘헛되게 약속한다’는 뜻의 ‘空約束’이 되지 않고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광주 동구 인구정책 ‘실속 있고 빛나네’

광주 동구의 인구정책이 눈에 띈다. 함께 출산율과 청년인구 비율이 광주 5개 자치구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 동구 합계출산율은 0.86명이었다. 이는 이 기간 광주시(0.70명)와 서구·남구(0.59명), 광산구(0.77명), 북구(0.72명)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동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 5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랄만한 변화다.

또 동구는 인구 대비 청년(만 19~39세) 비율(2023년 28.13%, 2024년 27.65%) 역시 광주 자치구중 가장 높다. 2019년 2만7538명이었던 청년 인구는 2020년 2만9273명, 2021년 2만9179명, 2022년 2만9897명, 2023년 3만151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에 힘입은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속적인 청년층 유입을 위한 동구만의 청년정책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광주 동구는 예전만 해도 ‘호남 1번지’로 불릴 정도로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1973년 31만514명으로 절정에 달했던 인구는 1980년 후반부터 본 광주 외곽 ‘아파트 붐’과 1990년부터 시작된 도심 공동화, 각종 공공기관 이전 등이 겹치면서 20년도 채 안돼 20만명대가 무너지며 매년 감소세를 보이더니 2015년에는 9만4000여명으로까지 추락했다.

이에 동구는 민선 7기가 출범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살기 좋은 동구 만들기’와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 만들기’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임신과 출산,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 플랫폼인 ‘동구 육아카페’,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동구 맘 택시’ 등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인구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 인구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그결과 동구 인구는 2020년 9월 10만명을 회복한데 이어 지난해 10만 5151명 등 지금까지 10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민선 7·8기 동구의 인구정책이 실속을 겨두며 빛나고 있는 것이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야간)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